



통합시장 후보에 듣는다 김영록 예비후보

“전남광주 행정통합 시대적 흐름 지방 성장 모델 완성까지 책임”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의 모델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앞두고 초대 시장 선거의 무게감이 커지는 가운데, 김영록 예비후보는 ‘통합 설계자’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전남지사 재선과 중앙-지방을 아우른 행정 경험을 기반으로 통합 이후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산업·재정 구조를 빠르게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반도체·AI·에너지 중심의 산업 재편과 20조원 재정 인센티브 활용,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 예비후보를 만나 통합특별시의 초기 과제와 산업 전략, 균형발전 구상, 리더십 방향 등을 중심으로 향후 청사진을 들어봤다.

- 초대 통합특별시장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말해 달라.

△ 예비경선을 마친 만큼 당원들의 선택에 감사드립니다. 전남광주는 통합이라는 새로운 길을 앞두고 있으며, 첨단산업과 일자리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 동시에 출범 초기 혼선과 지역 간 갈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첫 4년이 매우 중요하다. 향후 전남광주의 방향과 시민 삶의 질이 이 시기에 결정될 수 있다. 풍부한 광역행정 경험과 소통 능력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다. 전남광주는 더 이상 주변 지역이 아니라 서울과 경쟁하는 국가 핵심 축으로 도약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하겠다.

- 통합특별시장 선거에 도전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

△ 전남과 광주는 오랜 기간 소외된 구조 속에 있었지만, 통합을 계기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았다. 다만 통합은 시작일 뿐이며, 출범 초기 6개월이 핵심이다.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시민 생활

통합시 출범후 6개월 최대 승부처...행정 안정·산업 유치 등 주력 3100만평 기반 ‘풀사이클 반도체’...광주·동부·서부 역할 분담 20조 재정 인센티브, 산업·일자리 집중...27개 시·군 격차 해소

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활용해 산업 기반을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지역 간 현안 조정과 균형발전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과업을 준비된 리더십 없이는 수행하기 어렵다. 통합을 설계하고 추진해 온 만큼 이를 완성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한다. 전남광주를 수도권 중심 구조를 넘어서는 지방 성장 모델로 만들고, 국가 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후보께서 구상하는 통합특별시의 미래 모습은.

△ 통합의 핵심은 재정과 권한의 확대다.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 구조 변화와 20조원 규모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특별시는 서울과 같은 위상을 갖고 정책 결정 과정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유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산업 기반을 강화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재생에너지와 용수 등 강점을 활용해 반도체 중심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산업과 교육이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동시에 농어촌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강화해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일 것이다.

- 전남·광주를 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 AI와 에너지 전환 시대에서 광주·전남은 재생에너지 기반 경쟁력이 크다. 이를 토대로 반도체 산업 유치기 가능하다.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산업용지 확보 측면에서 투자 환경이 유리하다. 약 3100만평 부지에 반도체 기업과 관련 산업을 집중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설계부터 생산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광주권은 인재와 설계, 서부권은 데이터센터와 생산, 동부권은 소재와 양산 중심으로 역할을 나눈 산업 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

- 정부가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재원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 재정 인센티브는 단순 인프라 투자보다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활용해야 한다.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27개 시군구 재정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도 필요하다. 4년 이후에도 재정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통합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취약계층과 농어민, 중소기업 지원도 강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합동토론회에서 핵심공약을 설명하고 있는 김영록 예비후보

화해야 한다. 또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 구축도 병행해야 한다.

- 통합 이후 광주·전남 동부권·서부권 간 균형 발전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 발전 전략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 통합이 특정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기본 원칙은 균형발전이다. 재정 인센티브를 활용해 낙후 지역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하겠다. 일자리와 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지역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AI, 에너지, 우주 산업 등을 유치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창업 지원으로 정착을 유도하겠다. 도시와 농촌 자원을 연계해 상생 구조를 만들고, 권역별로 산업과 지역 특성을 결합한 발전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 통합특별시의 행정 중심지와 청사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 광주, 무안, 동부청사를 유지하며 분산 운영하는 방향이 기본이다. 통합 이후 행정 기능이 확대되면 각 청사의 역할도 함께 커질 것이다. 특정 지역에 기능이 집중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주청사는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분산 배치도 검토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 통합특별시는 기존 광역단체와 다른 새로운 행정 모델이다. 초대 통합특별시장에게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다. 시민 생활에 혼란이 없도록 하면서 재정과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통합 초기에는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을 모두 경험한 행정 능력과 현장 중심 소통이 핵심이다. 결국 성과는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 광주·전남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 통합은 시대적 흐름이며 시민의 선택이다. 이를 제안하고 추진해 온 만큼 완성까지 책임지겠다. 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의 모델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미래 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지역 청년단체 ‘호남영포럼’ 회원들이 지난달 21일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1일 ‘(사) 남도의 빛’ 회원들의 지지선언을 듣고 있다.